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전정되지 않을 자유, 중계리 팡팡나무

식물을 관찰하기 위해 방문하는 식물원과 정원은 늘 식물을 가꾸는 원예가가 있다. 이들은 쪼그라 앉아 풀을 심거나 나뭇잎을 굽어 모으고 호스를 끌어서 식물에 물을 준다.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유독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원예가를 자주 만났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나무가 무척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 전정을 자주 해야 한다고 한다. 사다리를 타고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에 올라 가지에 몸을 기대어 가위를 어리저리 대어 보는 원예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우리 곁의 나무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심어진다. 가로수와 조경수의 경우 도시 미관을 위해 심어지며, 우리가 먹는 사과와 배, 감 등의 과수는 오로지 식용을 위해 심어진다. 우리가 이런 식물을 전정하는 목적도 두 가지다. 경관을 위한 식물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과수는 더 많은 양을 수확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식재되는 나무 중하나가 회양목이 아닐까 싶다. 길가의 크고 작은 화단, 도로와 건축물 주변에는 늘 회양목이 있다. 이들은 공해와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병해충도 적고 강건하다. 물론 회양목의 최대 형태를 오래도록 유지한다는 점이다. 전정해도 금방 제멋대로 가지와 잎을 뻗는 나무가 있는

반면 회양목은 한번 전정 해 두면 수년 간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 이들은 1미터가 되지 않는 높이로 직사각 혹은 구형 형태의 '가구'처럼 이용된다. 지나는 사람에게 선상을 유도하고, 공간을 구분 짓는 것이 도시 회양목의 역할이다.

그러나 숲에서 스스로 번식해 자라난 회양목은 우리가 도시에서 보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인간이 끼어들지 않는 삶을 사는 회양목은 높이 3미터까지 자라며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난다.

제작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교내의 식물을 관찰해 그림으로 기록하는 수업을 하던 중 한 어린이가 회양목을 '네모 나무' 부르는 것을 보았다. 늘 네모난 모양의 나무로 존재해서 네모 나무라고. 나는 언젠가 산에서 만난 회양목 사진을 찾아 어린이에게 보여 주었다. "이 나무도 회양목이야. 회양목은 숲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비단 어린이란 회양목을 네모 나무로 부르는 건 아니다. 도시에서 단정히 전정된 형태의 나무만 보아온 사람들은 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회양목, 향나무, 측백나무를 만나더라도 자신이 아는 그 식물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부 지역에서는 팡팡나무가 회양목의 역할을 대신한다.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이들은 제주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자란다. 팡팡나무라는 다

소 독특한 이름은 불에 탈 때 '팡팡' 소리를 낸다고 붙여졌다.

이들 잎의 크기는 회양목보다는 조금 더 크고 잎에는 거치가 있다. 여름에 흰 꽃이 지면 둥근 열매가 가지에 매달려 난다. 빛깔은 연두색으로 시작해 보라색, 검은색으로 익어가고 다시 검은색에서 보라색 그리고 흰색으로 물이 빠진다. 나는 이 열매 색의 변화를 좋아한다. 물론 우리가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건 단정하게 전정된 수형이기에 꽃과 열매의 색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전북 부안 중계리에는 천연기념물로 보호 받는 팡팡나무 군락이 있다. 이들은 도시에서 마구 전정되는 팡팡나무와는 다른 삶을 산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으며 도시의 것보다 잎 색도 더 진한 청록색이다. 가지마다 잎이 풍성히 들어차 있지도 않다. 숲의 나무를 볼 때면 도시 나무의 과도한 풍성함 또한 인간이 자연에 기대하는 요소라고 느낄 때가 많다. 오히려 잎의 빈자리가 있을 때, 가지가 마구잡이로 난 모습일 때 비로소 '이것이 자연스러우니까' 싶다.

중계리의 팡팡나무 사진을 열심히 찍으며 생각했다. 누군가 도시의 팡팡나무를 두고 네모 나무라 부른다면 이 사진을 보여 주려고.

나는 우리 곁의 나무들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식물 세밀화가>

社說

5월·특전사 단체 화해, 진정성 있는 소통부터

특전사 동지회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놓고 5·18 단체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한 특전사 동지회 관계자들은 오는 19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월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 초청으로 5·18 희생자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는 부상자회를 중심으로 5월 3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가 국민 화합 차원에서 교차 참배에 합의하고 5월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날 계엄군들이 묻혀 있는 국립 현충원을 참배한 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마련됐다. 5월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는 앞서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고 다짐하는 등 다섯 개 항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오는 19일 광주에서 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5·18유족회가 "진정한 고백과 사죄가 먼저"라며 행사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부상자회 일부도 보이콧하겠다고 밝히면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오월어머니집과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특전사 동지회의 참배 반대에 가세하면서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5월 3단체와 특전사 동지회 간 화해 모드는 43년만의 5·18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합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어렵게 모색한 화해 모드가 틀어질 위기에 처한 것은 화해를 주도한 5월 단체 지도부의 성급함과 미숙한 일처리 탓이 크다. 5월 3단체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보다 급하게 교류 행사를 추진한 데다 초청 행사 중 특전사 근거리 '검은 베레모' 제작이 포함되도록 방치해 화를 키웠다.

어렵게 마련한 화해 모드를 이어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5·18 당사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5월 단체끼리 한목소리로 화합을 이끌어 낸다면 특전사 동지회도 진정된 사과와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지 않겠는가. 시민사회 단체들도 분열을 조장하는 목소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인구·의식 감소... 변방의 호남 정치 복원하려면

지역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호남 정치가 점차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주민 수 급감에 유권자 및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60년 호남 인구는 594만 명으로 총인구(2498만 명)의 23.8%를 차지, 519만 명(20.7%)이었던 수도권보다 많았다. 60여 년 새 호남 인구는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급팽창했고, 충청은 호남을 추월한 것이다. 인구수 감소는 정치적 영향력 약화로 이어졌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39석이었던 호남 국회의원 지역구는 현재 28석으

로 11석이나 줄었다. 대조적으로 수도권은 같은 기간 82석에서 121석으로 늘었다. 더욱이 내년 22대 총선에서 호남의 지역구는 두 석이나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은 역대 정부의 경부축 중심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진 호남 지역민들이 수도권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대거 이동하면서 빚어졌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입법·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여론을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나 주변화되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 역시 그동안 민주당 독점 구도 속에 낙후 극복에 한계를 보인 데다 비전 확보와 신진 육성에 소홀하면서 입지가 취약해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호남 정치권이 소통과 결집을 통해 분권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통합의 정치로 호남권 시도가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주의보



민 주 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호흡기센터장

겨울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나들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외출이나 쇼핑은 물론 야외로 나가는 인파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환절기인 이맘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불철 환사와 미세먼지가 바로 그것이다. 광주 지역도 2월 들어 수차례 미세먼지와 황사가 찾아오면서 목이나 기관지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사태 3년여 동안 착용했던 마스크로부터 벗어나려는 이들이 대다수이지만 지금같이 황사나 미세먼지가 잦을 때는 그날그날 일기예보를 보며, 마스크 착용 여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철 환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통 3월부터 높은 수준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는데,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미세먼지는 각종 중금속을 함유한 먼지나 입자가 매우 작아 인체 깊은 곳까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때에 유입된 유해 요인은 염증을 유발해 발생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폐암만큼 무섭다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 기도가 좁아지고 폐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흡연, 유해가스 노출, 공기 오염 등으로 폐와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생겨 발병하며 특히 불철 환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

국내 45세 이상 성인 다섯 명 중 한 명, 65세 이상 노인 세 명 중 한 명에서 발병하며 환자 70~80%는 흡연과 연관된다. 비흡연자는 결핵과 천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발병 시 폐기능 저하와 호흡 곤란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2020년 전 세계 10대 사망 원인으로 COPD가 3위를 기록했는데 2050년에는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2020년 국내 인구 10만 명 당 11명이 COPD로 사망해 사망 원인 11위를 차지할 만큼 위중한 질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0세 이상 유병률은

13.3%, 70세 이상은 48.5%로 노년층 유병률이 높다. 대부분 초기 증상은 거의 없지만 폐기능이 30~40% 떨어진 상태가 되어 발견될 만큼 조기 발견과 대응이 어려워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특히 발병은 흡연 후 10년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흡연을 해 온 중년층 남성 발병률이 높다.

호흡 곤란, 기침이 계속되면 COPD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초기 증상은 호흡 곤란, 기침, 가래, 흉부 불편함과 답답함 등이 생기고 증상이 되면 기침, 가래가 늘어나고,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가 느리며, 숨이 차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COPD는 엑스레이(X-ray) 및 폐기능 검사로 중증 상태와 타 질병 여부를 확인, 폐활량 측정으로 진단하며 진료를 통해 흉곽 앞뒤가 불룩해지는 '슬통형 흉곽' 여부를 확인한다. COPD 치료율은 84.7%로 고혈압(61.7%), 당뇨병(60.8%)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선제 예방으로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관지 확장제 등 약물 치료와 신체 운동 등 호흡 재활 치료를 시행한다.

한번 손상된 폐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금연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간 흡연을 하게 되면 폐세포 손상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폐기종이 발생하여 COPD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 고

주민 삶 억압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이 규 현 전남도의원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해 인접한 나주·화순·장성·담양이 함께 동그란 형태로 묶여 있다. 면적은 광주가 267.62㎢인 반면, 전남이 287.07㎢로 전남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필자가 살고 있는 담양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108.50㎢)이 도시 녹지 조성 명목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면서 지역 민들이 오랜 기간 수많은 부당함을 감내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심지 주변의 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이름으로 묶인 면적은 총 554.69㎢로 도심지 반경 5~8km 구간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현재까지 해제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도 고작 7.7%인 42.99㎢ 수준에 불과해 여타 광역도시권보다 해제 비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나마 해제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을 살펴보면 광주진곡산단, 광주연구개발특구, 효천택지 개발 지구,

향동 위생매립장 등으로 도심 주변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잃어 버린 곳이나 기성 시가지의 고밀 개발 해소를 위해서만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시군 지역은 지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재산권을 반세기에 가깝게 억압받았으며, 도심지 주변을 둘러싼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지의 지가를 오히려 치솟게 만들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명칭은 그린벨트다. 말 그대로 도시의 경관 정비와 환경 보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녹지대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 그린벨트는 어더한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등으로 농경지나 하우스 등 재배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인 공해 완충, 열섬 효과 완화 등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그린벨트 지역은 이미 농업진흥구역, 무동산 국립공원 보호구역, 상수원관리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갖은 보호구역에도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사만을 신설·운영하고 비수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

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인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단순히 위원장을 지역 사람으로 하고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개편해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에게 형평성을 제공해 줘야 한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 확산을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체계적인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용도별 구획을 정하고 공공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 과밀화 해소를 위한 지구 조성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당장 해제가 어렵고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면 현재 지역 주민의 토지가 장기간 사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으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토지 소유에 따른 세금만 부과하는 '편무'(片務)적인 행태를 탈피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방적인 규제만을 강요한 지도 50년이 넘었다.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을 도심 개발의 미개척지로 보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헤아려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無等鼓

국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성과를 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시기는 아마도 네 개의 정당이 사분할하던 1988년 4월부터 1990년 1월 3당 합당 직전까지 약 2년 간이었다. 한정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였는데, 어떤 정치 세력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대화와 타협은 당연했다. 175석의 야당·무소속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언론통폐합, 전두환 정권의 권력형 비리 등의 청문회가 열렸고, 월북 및 납북 작가 작품 해금, 공연 사전 심의 철폐 등

러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수도권은 더 커져 지방은 소멸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최근 만난 후배가 초등학교 자녀에게 들어가는 학원비를 걱정하고 있었다. 선행 학습 중심의 사교육을 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루하루가 버거워 아이들을 공교육에만 맡겨야 하는,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 줄 수 없는 평범한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문제투성이 교육 시스템이지만, 고쳐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180석 무용론

2020년 180제21대 총선에서 4월 총선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1990년 여당과 두 개의 야당이 합쳐 만든 민주자유당(217석)에 이어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거대 정당이다. 2년여 동안은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재벌, 부동산, 국가 불균형, 2할 자치 등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재 기용 등에 실패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오히려 부에 이어 직업까지 대물림하는 지경에 이르

기 후배는 "이재명·김건희 수사가, 함동훈·김의겸의 말장난이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169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파벌·계파에 충성하며, 공천장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그들은 말 그대로 기득권 세력이다. 허송세월한 2년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심정으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